

DOI: 10.23063/2025.03.8

일본의 중장기 체류 외국인¹⁾ 정책과 지자체 동향

Japan's Foreigner (Mid and long term resident) Policy and Its Local
Government Trends

네모토 마사쓰구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연구교수)

Nemoto, Masatsugu (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배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경제 활성화와 사회 유지를 위하여 외국인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1억 2,488만 명으로 15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한편, 외국인 인구는 최초로 300만 명을 넘어 최대를 기록하였다(NHK, 2024). 2022년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2.4%이며, 그 비율이 약 50년 후인 2070년에는 12.4%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木内登英, 2024)도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하고 출입국재류²⁾관리청을 설치, 2027년 기능실습제도 폐지(육성취로 제도로 전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는 다문화 도시 비전 책정, 외국인 지역 리더(방재 등) 육성, 지방 공무원 채용, 외국적 학생 지원, 다문화 어린이집 등 선행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외국인 정책 동향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자체 차원의 정책으로 나뉘 볼 수 있으며, 각각 최근 변화 내용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인 체류 카드 교부 대상이 되며 중장기 체류 외국인이라고 불린다. 이하, 본문 중에서 외국인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체류 외국인을 가리킨다.

2) 한국에서는 '체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유명사로 출입국 '재류' 관리청으로 번역하였다.

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가.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으로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 ‘특정기능’이라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하였다. 이는 일정한 기술과 일본어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최장 5년간 특정 산업 분야에서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가 있다. 각각 대상 산업 분야는 <표 1>과 같다.

그리고 특정기능 1호는 일정한 전문성·기

능을 가지고 있는, 즉 전력이 되는 인재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기능 2호는 특정기능 1호보다 높은 전문성·기능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재의 수용과 체류관리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2019년 4월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설치하였다. 출입국재류관리청(2023)은

① 체류 목적에 부응한 생활 오리엔테이션의

표 1.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 대상 산업 분야 |

구분	장기 요양	빌딩 청소	공업 제품 제조업	건설	조선 선박 공업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음식료품 제조업	외식업
1호	○	○	○	○	○	○	○	○	○	○	○	○
2호	-	○	○	○	○	○	○	○	○	○	○	○

출처: 저자가 작성한 자료임.

표 2.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 차이 |

구분	특정기능 1호	특정기능 2호
체류 기간	1년·6개월·4개월마다 갱신(통산 5년까지)	3년·1년·6개월마다 갱신(갱신 상한 없음)
영주자격 취득	불가	요건 충족 가능성 있음
기능 수준	상당 정도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	숙련된 기능(각 분야 시험으로 확인)
외국인 지원*	필수, 지원계획 책정 실시 의무	지원계획 책정 실시 불필요
가족 동반	불가	요건 충족 시 가능
일본어 능력 시험 유무	있음	없음
시험 실시	국내외 실시(2023년 4월 기준)	2023년부터 실시(일부 분야 미실시)

주: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은 10개 의무 지원 항목 중, ① 입국 전 생활 안내 제공, ② 입국 시 공항 마중 및 귀국 시 공항 배웅, ③ 외국인 주택 확보, ④ 체류 중 생활 안내, ⑤ 민원 절차 동행, 각종 행정 절차 정보 제공과 지원, ⑥ 생활을 위한 일본어 습득 지원, ⑦ 외국인 상담·고충 대응, ⑧ 외국인과 일본인 교류 촉진에 관한 지원, ⑨ 비자발적 이직 시 전직 지원, ⑩ 정기적 면담·행정기관 통보를 포함한다(WILLOF WORK, 2024).

출처: “特定技能1号と2号の7つの違いを徹底比較！取得要件や在留期間に注目”, 井手清香, 2024. <https://global-saponet.mgl.mynavi.jp/visa/2685>

착실한 실시, ② 지자체 다언어 대응 원스톱 상담 창구의 설치 촉진, ③ ‘쉬운 일본어’ 보급 촉진, ④ 일본어 교육 기회와 내용의 다각화, 교육 품질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최소한 마련해야 할 여건 정비, 그중 특히 법무성(法務省)에서는 외국인 고용 기업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주점을 두고 있다.

나. 지자체 사례

지자체에 의한 외국인 정책 사례로 시즈오카(静岡)현(縣) 하마마쓰(浜松)시(市), 군마(群馬)현 오이즈미(大泉)정(町), 이바라키(茨城)현 조소(常総)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사례를 선정한 이유로, 하마마쓰시는 특히 재난 시 외국인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 오이즈미정은 지방 공무원 채용에 국적 제한을 철폐하였다는 점, 그리고 조소시는 주로 민간에서 다문화 보육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시책에 더하여,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선진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하마마쓰시의 인구는 약 78만 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3.7%인 약 2만 9000명이다. 1990년대부터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대응하여 다문화 공생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하마마쓰시 다문화 공생 도시 비전’을 책정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중 특히 위기 관리 대책(재해·감염증 등)에 있어 재해 시 외국인 지원 정보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한 방재대책(재해 시 다언어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방재 훈련 실시, 재해 시 다언어 지원 인재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일례로 하마마쓰시 국제교류협회가 외국인 방재 리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방재 리더를 육성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사례로 주목된다.

오이즈미정은 스바루, 파나소닉 등의 기업이 생산 거점을 두고 있어 2023년 기준 51개국 약 8300명의 외국인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 약 4만 1000명 중 약 20%를 외국인이 차지하는 오이즈미정은 외국인의 관점을 반영하는 등 다양성을 살린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이후 오이즈미정 직원(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의 지원 자격에서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는 국적 조항을 철폐하였다. 대상은 2025년 4월 이후 채용자로 일반 사무직과 토목직 등 총 7개 직종으로 외국인도 응모할 수 있게 되고, 채용시험의 형식은 기존대로 면접과 작문 등 일본어로 진행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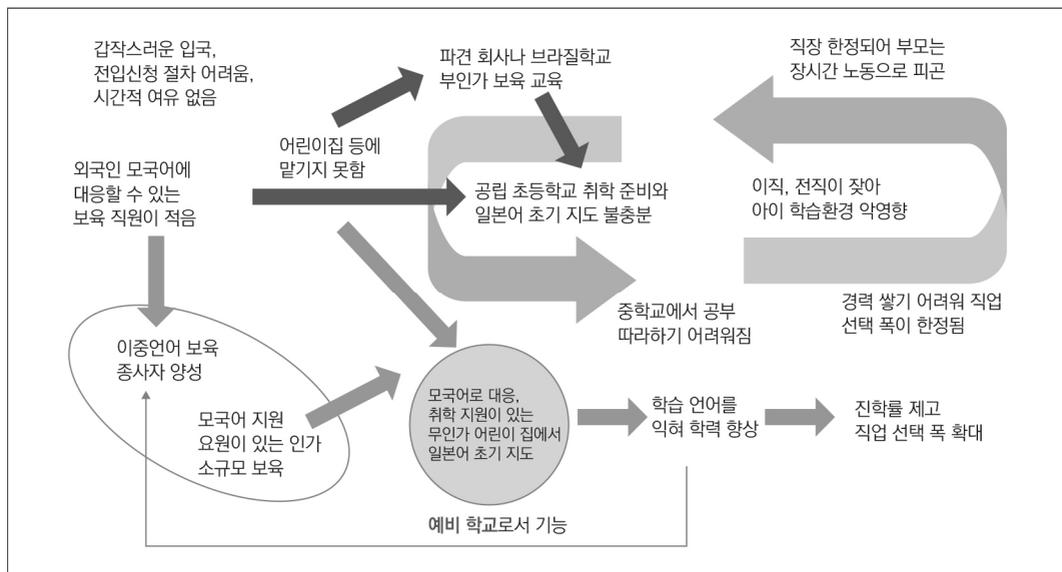
3) 한편 중앙정부 방침으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거나 지자체의 중요 시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고 있어, 오이즈미정은 외국인을 채용해도 세금의 부과·징수 등 업무 담당과 과장 이상에는 충당하지 않도록 하였다(奥原慎平, 2023).

마지막으로 조소시는 인구 약 5만 9000명 중 약 5900명이 외국인(10%)이다. 2015년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지원 활동조직으로서 민간단체(JUNTOS)가 조직화되어 그 이후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예컨대 ① 외국인 취업 취학 지원센터 운영, ② 외국인 취학 전 예비학교, 서머스쿨, 방과 후 및 토요일 방과 후 학교, ③ 재난 시 다언어 정책 책자 발행과 다언어 라디오 프로그램, ④ 지역사회에서 자란 외국적 청년 정주 지원, 공장 이외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경력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특히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을 통하여 외국적 주민 보육과 취학 환경을 개선하

여 지역 활약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다문화 어린이집 환경 정비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로 첫째, 이중언어 보육 인재를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다문화 보육을 실시하게 되고, 둘째,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셋째, 일자리가 늘어나고 육아 환경이 개선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넷째, 기업에서도 인재를 확보하기 쉬워진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나아가 이중언어를 활용한 직업으로 서비스업(콜센터, 자동차 판매, 보험회사, 주택 업체, 부동산, 호텔 등), 보육, 의료, 복지, 교육 등 직업 영역

| 그림 1. 외국적 어린이 보육과 취학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활약 인재 육성 |



출처: “빈집을 활용한 재난 피해지역 생활·커뮤니티 재건 거점 만들기 매뉴얼(空き家を活用した被災地の生活・コミュニティ再建拠点の作り方)”, 横田能洋, 2020. <https://juntos-engawa.com/pdf/JosoHouseReproductionManual2021.pdf>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응도 개선되어 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이어지며, 외국인 젊은 층이 경력을 쌓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와 관련된 잠재적 자원이 지역 진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3. 맺음말

현재 일본의 외국인 정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체류자격 신설과 출입국재류관리청 설치 등에 따라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하마마쓰시에서는 외국인 방재 리더

육성, 오이즈미정에서는 외국인 지방 공무원 채용, 조소시에서는 이중언어 다문화 어린이 집 운영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될지는 불명확하지만 향후 변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선진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외국인 문제가 내국인 문제를 닮아 간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 사회 분단 등의 외국인 문제는 국내 상황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万城, 2023)이다. 내국민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관점에서 외국인 정책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井手清香. (2024). 特定技能1号と2号の7つの違いを徹底比較！取得要件や在留期間に注目. <https://global-saponet.mgl.mynavi.jp/visa/2685>
- 木内登英. (2024). 政府は外国人材受け入れ拡大に動く：移民に近い特定技能2号の大幅拡充を.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1st/2024/fis/kiuchi/0404>
- 奥原慎平. (2023). 来年度から職員採用の「国籍条項」を撤廃 外国住民が2割を占める群馬県大泉町. 産経新聞. <https://www.sankei.com/article/20231228-6OPEZGWJ5JBVLGDQ2QDQPYKLYU/>
- 万城目正雄. (2023). ついに終わる外国人技能実習、30年の光と影 新制度への真の教訓は.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R9P447JR98ULFA00S.html>横田能洋. (2020). 空き家を活用した被災地の生活・コミュニティ再建視点の作り方. <https://juntos-engawa.com/pdf/JosoHouseReproductionManual2021.pdf>
- NHK. (2024). 日本の人口 1億2488万人 去年より約53万人減 外国人は過去最多.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724/k10014521531000.html>
- WILLOF WORK. (2024). 「特定技能」の支援計画とは？必須10項目や実施方法を徹底解説. <https://willof-work.co.jp/journal/9997/>